

반발 짝 물러선 靑…여야 대화 물꼬 틀까

문대통령 송영무·조대업 임명 미루고 대화의 문 열어

야당과 합의 불발시 강행 가능성…명분싸기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 국방·조대업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일단 야당과의 물 밑 대화를 통한 정국 정상화의 가능성을 열어 놔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제출부 시한이 지난 10일로 끝나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송·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미루면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명 결정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노림수도 숨겨져

있다. 협상을 통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설사 두 명 모두 임명한다 하더라도 야당과 충분히 대화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여당이 야당과 할 일이 훨씬 더 많겠지만 청와대도 전방위적으로 정부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이라며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독일 방문 기간에 발생한 민주당 추미에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등으로 과열된 정국을 가라앉히며 여야의 대화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밀어붙인다면 7월 임시국회의 공전 등으로 파국이 불가피한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국·독일 방문의 성과도 설명해야 하는데 임명 강행으로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마저 성사되지 않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여당의 입장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가 십아까지 전 수석에게 강력하게 임명 강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임명을 강행했다면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는 물론 당청 관계도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일부 참모진도 임명 강행을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국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매패의 입김이 강한 상황이며서 며칠의 말미가 있지만 여전히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핵심 측근들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인사 문제는 모두 별개 사안이며 서로 연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결국 최종 결정을 며칠 더 미뤘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는 임명 철회보다는 두 후보자의 임명이 불가하다는 점을 야당에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의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원만한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임명을 며칠 미뤘지만 야권과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임명 강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여야 관계가 파국으로 가면서 7월 임시국회 공전 등으로 민생과 현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쌍여가는 논란…해법 없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수사 확대

安 입장 표명 없이 잠행만

‘이언주 발언’까지 기름 부어

8월 전대에도 여론 싸늘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파문이 수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주의 의원까지 비정규직 학교급식 노동자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의원직 사퇴 요구 등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당의 이미지는 이미 타격을 받은 뒤였다.

안철수 전 대표의 처신도 당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안 전 대표의 경우 제보 조작 사건 관련, ‘대선 후보로서 최소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한다’는 목소리에 대답을 내놓기는커녕 지난 10일 속초 방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한 시민이 안 전 대표가 속초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 전 대표의 처신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당의 미래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11일 정동영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도 적절한 행보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선 돌파



“우리가 개·돼지로 보입니까?”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1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파업노동자 발언 관련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력이 있는 제대로 된 장수가 필요하다. 위기를 돌파하는데 저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 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국민의당이 당의 위기 국면과 관계없이 지난 10일 당무위를 열어 오는 8월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조재선 의원들도 위기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보다는 상황만 살피는 무력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여기저거서 약재가 툭툭 터지면서 백악이 무효인 상황”이라며 “결국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당의 향후 진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회 정상화’ 팔 걷은 與

우원식 3野 찾아 의견 청취…野 입장 고수에 합의 험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청와대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업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연기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최종 답판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임명을 연기한 덕분에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고, 야당의 국회 복귀 및 추경·정부조직법 협조를 요청할 명분이 더 강해졌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방침을 설명했으며, 백재현 예결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 역시 “여당 혼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협상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당을 향해 지나친 공세를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유화론’과 함께 정국 타개를 위해 추미에 대표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우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연달아 만났고, 여기서도 야당의 의견을 자세하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며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 오후 열린 예정이었던 7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무산됐다. 특히, 야 3당은 청와대의 송영무, 조대업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연기를 ‘임명 강행’을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두 후보자 중 1명을 낙마시키는 설을 흘리며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야당은 ‘둘 모두 부적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연기를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고민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화두는 ‘동반성장·상생협력·사회기여’

대한상의, 이달말 靑-그룹 총수 간담회 의제 협의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의 간담회에서 ‘동반성장·상생협력·사회기여’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15대 그룹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동반성장·상생협력을 통한 사회 기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간담회는 지난번 방미 성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문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의 간담회 관련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과거 주요 대기업 그룹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보여주기식’ 고용과 투자 계획을 내놓던 관행에서 벗어나 상생협력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필두로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이어지고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24일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다만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잡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 후보자에 대해 “30년의 공직생활 동안 강한 사명감과 확고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가졌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부정부패 척결, 범죄사 확립, 검찰제도 개선 등 검찰이 당면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요청 사유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